



<span style="color:red">↑</span> 코스피	2032.08 (+12.53)	<span style="color:blue">↓</span> 코스닥	623.25 (-2.52)
<span style="color:red">↑</span> 금리 (미국 3년)	1.24 (+0.01)	<span style="color:red">↑</span> 환율 (원-달러)	1193.30 (+0.30) (10일)



삼성바이오에피스  
브라질에 국내최초  
바이오횡품 공급  
04



추석 명절자금 방출

을 위해 현금유동을 높이고 있다.

추석 명절을 사흘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추석자금 방출작업  
을 위해 현금유동을 높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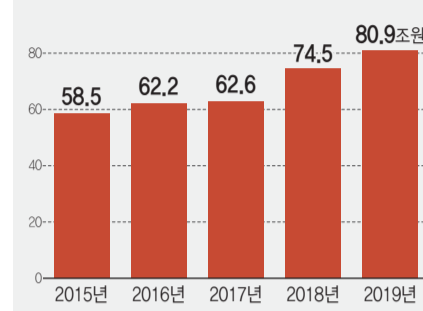
## ‘익명의 그늘’ 편법증여 악용우려

### 사모펀드의 세계

(3) 사모펀드의 그림자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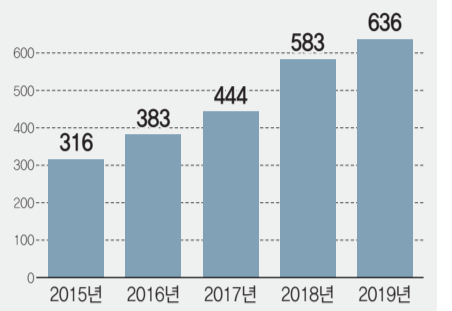
등록 PEF 총 636개 집계  
2년새 53%, 4년새 두배 ↑  
‘토종펀드’로 분류 되지만  
LP따라 자본유출 이뤄져

사모펀드(PEF) 출자약정액



\*2019년은 6월 말 기준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수



자료/금융감독원

국민 재산형성, 모험자본 공급 등 순  
기능을 하며 몸집을 키워온 사모펀드는  
최근 이슈였던 ‘조국 가족펀드’를  
통해 그림자도 드러냈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는 실제 투자자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  
고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  
고, 사실상 가족펀드 설립을 통해 재  
산 증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된 PEF는 총 636개로 집  
계됐다. 2년 전(416개)과 비교해서  
52.9% 늘어난 수준이다. 집계가 시작  
된 지난 2015년 10월 말(307개)과 비교

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PEF를 통한  
투자가 대중화되고 있는 셈이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와 PEF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 자산가  
들은 규제 사각지대인 PEF를 통해 편  
법적인 자산증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얼굴 감춘 투자자

PEF를 통한 투자는 국적을 감출 수 있  
다. 현행법상 국내 운용역으로 구성된 P  
EF는 ‘토종펀드’로 분류된다. 하지만 해  
당 PEF에 투자하는 LP(유한책임사원)가  
모두 중국인일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다. 토종펀드라는 이름 뒤에서 국내 자  
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PEF는 실질주주인 LP의 존  
재를 철저히 숨겨준다. PEF에 참여하  
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밝힐 의무가 없  
기 때문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기업에 투자하  
고 싶은 투자자는 PEF를 우회투자 경  
로로 활용기도 한다.

만약 B기업의 내부정보를 갖고있는  
A자산가가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한다  
면 지분 공시 의무에 따라 A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B기업에 투자  
하는 PEF에 LP로 참여한다면 A자산  
가가 B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드러  
나지 않는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신용, 등급 → 점수제 대출심사 기준 모호

### 내년 바뀌는 개인신용 평가체계

체크카드 실적 등 신용평가 활용  
금융이력 부족 중·저신용자 혜택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  
이 대출 심사 시 세분화된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할인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  
서다.

특히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저신  
용자에게는 신용점수제 전환에 따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1~2등급  
차주보다 금융 거래 정보가 부족한 중  
·저신용자의 경우 리스크 판단이 쉽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도를 제  
대로 평가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  
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가진 20대 청년  
864만명 중 329만명, 60대 이상 고연령  
층 1012명 중 348명이 최근 2년 이내  
카드 사용 이력이 없거나 3년 이내 대  
출 경력이 없는 ‘금융이력 부족자’다.

신용평가사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부분 4~6등급을  
부여해왔다. 각종 공과금을 연체 없이  
납부해왔던 고객임에도, 금융 거래 이  
력이 부족할 경우 낮은 신용등급을 받  
아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이력 외에도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나 체크카드 실  
적, 물품 대여료 지급 실적 등의 정보  
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대출 심사 시 합  
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인  
이 커졌다.

(2면에 계속)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국내 개인신용정보 부족층)

(단위:만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전체등급보유자	864.1	829.5	921	887.3	1012.7	4514.7
금융이력부족자	329.8	126.3	136.7	165.6	348.9	1107.2
4~6등급	298	106.3	107.5	127.3	313.9	952.9

/자료=금융위원회

## SK실트론, 美 듀폰사 웨이퍼 사업부 인수

‘헤테로 에피택시’ 국산화 첫 발  
4.5억 달러에 인수, 연내 마무리

SK실트론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  
퍼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다. 일본 추가  
수출 규제가 우려됐던 ‘헤테로 에피택  
시’ 웨이퍼 국산화도 첫 걸음을 내딛었  
다는 평가다.

SK실트론은 10일 미국 듀폰사 실리  
콘 카바이드(SiC) 웨이퍼 사업부 인수  
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4  
억5000만달러다. 국내외 인허가 승인  
을 거쳐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  
정이다.

SiC웨이퍼는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생산하던 첨단 제품이다. 실리콘 웨이  
퍼보다 단단하고 전압과 열에 강해 전  
기차 등에 주로 사용된다.

듀폰 SiC 웨이퍼는 독자 생산설비와  
설계 운영 노하우 등으로 글로벌에서 가  
장 수준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SK실트론은 100mm와 150mm SiC 웨  
이퍼 생산에 관련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듀폰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과 특허도 확  
보했다. 이를 통해 듀폰이 보유한 R&D  
및 생산역량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  
로벌 사업 확장도 지속키로 했다.

특히 SK실트론은 이번 인수를 통해

웨이퍼 국산화 작업에도 진일보를 이  
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웨이퍼를 2개  
물질로 만드는 ‘헤테로 에피택시’ 웨이  
퍼가 추가 수출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SiC 소재 기술  
을 확보하면서 더 다양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게 됐다.

SK실트론 관계자는 “금번 인수는  
빠른 시장 및 기술 진입을 위한 것으  
로, 향후 미국 현지 R&D 및 생산시설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  
이다”며 “향후 적시 투자를 통해 경쟁  
력을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소상공인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내달 첫 지정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발표  
저신용자에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생  
계형 적합업종이 내달 처음으로 지정,  
모습을 드러낸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  
치권이 함께 노력한다. (관련기사 4면)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내년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전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  
부 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  
책’을 발표하고 있다.

/송기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  
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등의 차관이 참석했다. 소  
상공인 관련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만 벌써 5번째다.

/김승호 기자 bada@

시장,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는다. 올해  
보다 1조원 늘어난 액수다.

L6·L7 추석 고향가는길